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참여와 사회 환경교육 : 현황과 개선대책

전 의 찬
(동신대학교)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우리 나라는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이래, 현재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수출위주', '중화학공업중심'의 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며, 그 결과 국민1인당 GNP는 1961년의 82 달러에서 1991년에는 6,000달러를 넘어서는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성장 일변도의 이러한 경제발전은 무분별한 자원의 낭비, 급속한 도시화와 함께, 다량의 오염물질을 환경에 배출시킴으로써,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하게 되었다.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부는 환경오염 문제를 다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1979년 12월 엄밀한 의미의 환경입법인 『환경보전법』이 처음으로 입법되었고, 1980년에 '환경권'이 「헌법」에 보장되고, 환경청이 설립되어 정부 차원에서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1990년 환경청을 환경처로 승격시키고 환경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처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우리 나라의 환경오염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시대'의 초기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장차 많은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와, 일반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주민참여의 질을 좌우하게 될 사회 환경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환경교육 현황은 '학교 환경교육'과 '사회 환경교육'으로 구분하여 기존 문헌을 수집 분석하고, 교육개발원(KEDI)과 환경처 등 관련 부서를 방문, 담당자와의 인

터뷰를 통하여 보다 상세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주민 참여에 관해서도 기존 문헌을 수집 분석하고, 주요 민간단체는 직접 방문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또 환경처를 방문하여 민간 환경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살펴보았으며, 최근 발생한 환경관련 사건과 관련된 주민 참여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공단환경오염방지협의회』 등 사회 환경교육 및 주민참여와 관련이 적은 단체들을 제외한 46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주민참여 및 사회 환경교육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단체현황과 문제점 및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파악하였다.

II.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참여와 사회 환경교육의 현황

1. 주민참여

1) 주민참여 현황

1991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환경정책기본법은 주요한 개발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공람에 의한) 주민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까지는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참여(Public Participation)'의 제도적인 장치가 없었다. 따라서 주민들이 환경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여 그들의 주장을 반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참여는 개인 차원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며, 사건별 지역별로 새로운 단체를 결성하거나, 기존 단체에 가입하여 이 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따라서 전국적인 환경단체의 연대나 지역이해와 관련이 적은 사건에 대한 주민의 참여는 대단히 낮은 편이다. 설문분석 결과에 있어서도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의 주민참여에 대하여 대부분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표 1〉 주민 참여 정도에 대한 평가

문항	활발한 편이다	그저 그렇다	활발하지 못하다	모르겠다
비율	0%	30%	70%	0%

주 : 설문분석에는 20개 단체가 응답하였음. (환경처 등록단체 5개, 미등록단체 15개 단체)

주민 참여의 방법도 환경처 “등록단체”(사단법인 및 사회단체)와 “미등록단체”에 따라 다르다. “등록단체”의 경우는 환경정화운동 계몽 및 홍보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 반면에, “미등록단체”의 경우는 항의시위와 서명이 대부분으로 정부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항의 시위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 공권력과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민간 환경단체들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우선순위로 다음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민 참여를 꼽고 있으므로, 이들 단체들의 활동방향은 앞으로도 주민참여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우선순위

문항	교육 및 홍보	오염방지 시설투자	지도 단속	기술개발	주민참여
비율	15%	20%	20%	10%	35%

2) 주요 환경사건과 주민 참여

가. 부산 반송동 쓰레기 매립장 반대 주민 운동

1990년 7월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반송동에서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인 (주)새환경이 폐기물 매립장을 건설하고 있었으나, 지역 주민들의 인근 도로 점령과 수일간의 철야시위로 1991년 2월에 백지화된 것으로 발표되었다.

나. 안면도 핵폐기물 저장기지 건설 반대 주민 운동

1990년 11월 충남 태안군 안면읍 일대 주민 2천여명이 「안면도 핵폐기물처리장건설 계획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자녀들의 등교거부, 파출소 습격 등 과격한 시위가 계속되었다. 「공해추방운동연합」 등 15개 단체에서는 “안면도 핵폐기물처리장건설 반대투쟁지원 공동대책위”를 결성하여 이 반대운동을 지원하였다. 결국, 안면도의 핵폐기물 저장기지 사건은 이 사건과 관련된 과학기술처의 장관이 사임하고 계획 자체를 백지화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다. 낙동강 폐놀 오염 사건에 대한 주민 참여

이 사건은 한국의 대기업중 하나인 두산그룹의 「두산전자」에서 1990년 11월 부터 1991년 3월까지 4개월간 폐놀 폐수 325톤을 무단 방류한 사건이다.

전국적으로 34개의 민간 환경단체가 “특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대구 및 부산의 37개 단체는 시민규탄대회를 열었으며, 두산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불매운동은 전국적으로 커다란 호응을 얻게 되어 폐수 방류공장이 소속된 그룹의 제품 판매는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게 되었다.

1991년 4월 다시 폐놀이 방류되는 2차 폐놀 오염사건이 정부의 미온적 대처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을 악화시켰다. 결국 환경처 장, 차관과 해당지역의 지방환경청장이 경질되었다.

라. 경북 선산 골프장 건설 반대 주민 운동

경북 선산 골프장 건설을 저지하기 위한 진정 및 집단시위가 1988년 1월 이후 수십차례 전개되었다. 1988년 8월 해당 면주민의 약 70%가 서명한 탄원서가 청와대, 경북도지사, 선산군 동 각 행정기관, 언론기관, 정당에 제출되었다. 1990년 11월 21일 골프장 부지에 건설장비가 투입되자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하고, 주민 500여명이 집단시위를 벌이고 4개월간 철야 농성을 전개하였다. 1991년 2월 5일 「경북지역 골프장 결사반대 공동대책위」 소속 8개 지역 1천여명의 주민이 경북대에서 “경북골프장반대 주민연대의 날” 행사를 가졌다. 골프장 건설 반대운동이 현재 전국적으로 약 30여곳에서 전개되고 있다.

마. 동양화학 TDI 군산공장 철거를 위한 주민참여

동양화학(주)는 1989년 8월 전북 군산 지방에 제조공정에 포스겐이라는 유독가스가 사용되는 TDI공장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1990년 9월 7일 정부로부터 가동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 공장이 폭발되거나, 제조과정에서 유독가스가 누출될 경우 주민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안겨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동안 집단시위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41개의 민간단체가 “군산시 TDI공장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회의”를 구성하고 공장 가동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시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여 1차와 2차에 걸쳐 총 94,778명의 서명을 받아 관계기관에 공장철거를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바. 주민참여에 대한 평가

앞에서 예를 든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 참여 외에도 대부분의 주민참여가 1988년부터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민주화 시기’와 때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독재체제에 의한 정보의 통제가 어느정도 완화되어 환경과 관련된 사건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주민들의 항의 시위 등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보다 완화된 것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최근 일련의 환경관련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1991년 3월과 4월에 발생한 “낙동강 폐놀오염사건”의 경우는 신문 등에 거의 1달간에 걸쳐 관련기사가 게재되고 이와 관련된 특집이 기획 발표되었으며, 관련 회사 제품의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진 것으로 보아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성숙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쓰레기 매립장, 핵폐기물저장기지 등과 관련된 사건은 ‘NIMBY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들로

서 1991년도 상반기부터 시작된 지방자치 시대가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3) 환경단체 현황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참여를 주도하고 있는 환경단체들은 환경처 “등록단체”와 “미등록단체”에 따라 단체의 성격 및 활동영역이 상이하므로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표 3〉 환경처 등록단체 현황

단체성격	자연보호	환경보전	연구단체	직능단체	친목단체	지역단체	계
단체수	3	4	3	9	1	25	45
(비율)	(7%)	(9%)	(7%)	(20%)	(2%)	(55%)	(100%)

“자연보호단체”에는 3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다. 자연보호를 주 활동으로 하는 이러한 단체들은 70년대 이전부터 활동하기 시작하였으며, 가장 오래된 단체는 문공부의 인가를 받고 활동하고 있는 「한국자연보전협회」이다. 이러한 단체들은 비교적 전문성을 띤 학술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다.

“환경보전단체”에는 「환경보전협회」 등 4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다. 「환경보전협회」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서울에 본부를 두고 11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해배출업체나 환경관리기사가 회원으로 되어 있다. 「환경보전법국민추진협의회」는 1989년 1월 범국민운동 계획 및 시행, 환경보전 홍보 및 계몽을 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18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연구단체”에는 3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연구단체”에는 「환경과학연구협의회」가 있다. 이 환경과학연구협의회에는 17개 학회가 가입되어 있으며,

〈표 4〉 환경처 미등록 단체 현황

성격	환경운동단체	환경문제연구단체	지역환경단체	부차적 단체				계
				종교	소비자	여성	직능	
단체	7	3	15	4	5	6	5	45
(비율)	(16%)	(7%)	(33%)	(9%)	(11%)	(13%)	(11%)	(100%)

“환경운동단체”는 전국을 대상으로 환경운동을 주종으로 하는 단체로서, 「공해추방운동연합」, 「전국해발전소추방운동본부」, 「자연의 친구들」 등 7개 단체가 있다. 대표적인 단체인 「공해추방운동연합」은 대학생 환경운동 소그룹이 중심이 된, “공해추방운동청년협의회”와 시민 환경운동 단체인 “공해반대시민운동협의회”가 1988년 하나의 단체로 통합된 단체로서, 대부분의 환경관련 시민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자연의 친구」들은 시민운동을 통한 인간과 자연의 괴리현상을 극복하여 균형잡힌 삶의 양식을 추구하려는 데 설립목적이 있다.

환경운동에도 참여하지만 구성원의 성격과 기존의 역

가. 환경처 등록단체 현황

환경처에 등록된 단체는 환경처에 등록된 ‘사단법인’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단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5개 단체가 있다.

이 단체들을 성격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 〈표 3〉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다.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에 기초를 둔 순수한 연구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다.

“직능단체”에는 9개 단체(「한국환경청소협회」, 「한국폐수처리수탁협회」, 「한국환경오염방지시설업협회」 등)가 등록되어 있으며, 주 활동은 회원의 권익보호와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단체”에는 각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배출업소들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공단지역 환경보전협의회” 25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다.

나. 환경처 미등록단체 현황

“미등록단체”는 환경문제 해결을 주목적으로 하는 “환경전문단체”와 환경의의 목적으로 운영되지만 단체 안에 환경관련분과를 설치하거나 환경전문단체와 연대하여 사회운동의 하나로서 환경문제에 참여하는 “부차적 단체”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을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표 4〉와 같다.

할로 미루어 “환경문제연구단체”로 분류한 단체에는 3개 단체가 있다. 대표적인 “연구단체”인 「환경과 공해연구회」는 사회운동단체들의 접근이 어려웠던 환경정보나 과학적 지식에 관한 부분에 접근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환경관련 대학의 교수 및 연구원들이 중심이 되고 있다.

“지역환경단체”는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환경운동에 역점을 주는 단체로서, 「목포녹색연구회」, 「울산울주 공해추방협의회」 등 15개 단체가 있다.

“환경운동단체”, “환경문제연구단체”, “지역환경단체” 등은 주활동이 환경문제해결에 역점을 주는 진정한

의미의 환경운동단체라고 할 수 있다.

“부차적 단체”들은 목적에 따라 “종교단체”, “소비자단체”, “여성단체”, “직능단체”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단체는 환경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기존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거나 다른 환경단체와 협력하여 환경문제해결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일찌기 결성되고 조직이 잘 정비된 “종교단체”는 환경위원회를 산하에 설치하거나 하여 복음적 차원에서 평화사회의 구현이라는 목적으로 환경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요즘 활발한 운동을 보이는 단체는 “소비자단체”와 “여성단체”이다. 이들은 80년대부터 꾸준히 합성세제 적정량쓰기운동, 페비닐수거운동, 수은전지수거운동 등을 홍보하거나 실천하여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농약오염문제, 먹거리오염문제 등과 같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문제들을 제기하여 1988년 전개된 “자몽 불매운동”과 같이 큰 효과를 얻은 바도 있다.

80년대 후반부터 결성된 의사, 치과 의사, 약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직능단체”는 소외된 노동자, 빈민 등의 무료진료나 지역주민단체와 연대하여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고 과학적인 전문성을 아울러 실력있는 환경문제 규명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 환경단체의 설립연도를 살펴보면, “등록단체”의 경우는 80년대 이후 꾸준히 설립되었으나, “미등록단체”의 경우는 대부분 1988년 이후로서 한국의 주민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진 시기와 때를 같이하고 있다.

본 조사를 통해 살펴본 민간 환경단체의 회원수는 대부분 1000명 미만이며, 미등록 단체는 「공해추방운동연합」을 제외하고는 전부 1000명 미만의 회원을 갖고 있다. 연간 예산에 있어서도, 「공해추방운동연합」을 제외한 환경전문 미등록 단체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여, 1억원 이하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4) 환경처의 민간 환경단체에 대한 지원

환경처는 1989년 11월 “전 국민의 환경보전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환경보전범국민추진협의회」를 발족시키고 이 단체에 1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 단체에는 현재 「환경보전협회」, 「소비자 보호단체협의회」, 「새미를 중앙운동협의회」 등 18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환경운동을 주도 하고 있는 환경처 미등록 환경단체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 정부는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에도 별도로 1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

2. 사회 환경교육 현황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환경교육’은 1986년 「공해추방운동연합」의 전신인 「공해추방시민운동협의회」

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회 환경교육은 환경분야에 관련된 전문인력에 대한 ‘전문환경교육’과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한 ‘민간환경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1986년부터 환경처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는 환경교육은 주로 민간인, 군인, 예비군 등을 대상으로 1990년 8월 현재 145만 4588명이 이수하였으나, 이러한 교육은 대부분, 1-2시간에 걸쳐 전문 강사 없이 VTR, 슬라이드를 통한 단편적 피상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실질적인 환경교육은 「국립환경연구원」과 「환경보전협회」에서 환경관련 공무원, 환경영향평가요원, 배출시설관리인을 대상으로 2일-4주에 걸친 전문교육과정이 있다. 그러나 이 교육과정은 실무교육 훈련으로서 환경운동 또는 환경실천운동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민간인에 대한 환경교육은 주로 민간단체, 그 중에서도 미등록 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공해추방운동연합」이나 「환경과 공해연구회」, 「하늘 땅 물 벗」(천주교 서울대교구) 등을 중심으로 환경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미등록 단체”의 환경교육프로그램은 회원 및 시민에게 개방되어 있고 주 1-2회 총 8-16 강좌로 이루어져 있다. 교육내용은 대부분이 주제별로, 강의, 비디오, 현장답사를 병행하고 있으나 강의 및 강연(41%)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회원 또는 비회원인 교수 및 전문가들이 강사로 활용되며 참석자의 반응은 좋거나 아주 좋다고 평가하고 있다.

「공해추방운동연합」은 1986년 전신인 「공해방지시민운동협의회」에서부터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국내에서 가장 먼저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주2회 1개월 단위로 년 2회 평균 50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배움마당”을 열어 현재 11기를 배출한 상태이며, 주1회 총 6회 실시하는 “공해추방을 위한 여성교육”이 현재 7기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환경과 공해연구회」에서는 '91년부터 “환경학교”를 개설하여 주1회 총 16 강좌에 걸쳐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연3회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현재 7기 환경학교가 진행되고 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내의 환경운동단체인 「하늘 땅 물 벗」은 1991년 결성되었으며, 1992년 시작된 “천주교 환경학교”는 현재 5기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학교”는 매 회 100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주1회 총16 강좌로 구성되어 있다. 종교단체가 갖는 조직적인 특성으로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환경전문 단체와 부차적인 환경단체의 환경교육은 정부의 도움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소규모, 영세적이기는 하지만 환경현황을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간 환경단체들은 자체의 환경교육의 성과에 대하여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표 6>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민간단체들은 현재의 환경교육에 대해서는 좀 더 활발히 전개할 필요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환경교육 참가자의 반응

문항	아주 좋다	좋은 편	보통	효과없음	실망
비율	21%	79%	0%	0%	0%

<표 6> 환경교육에 대한 민간단체의 활동

문항	활발하다	활발한 편	미약한 편	아주 미약
비율	5%	42%	47%	5%

Ⅲ.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참여와 환경교육에 있어서 문제점

1.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민간 환경단체의 평가는 대단히 부정적이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단체는 환경처의 감독과 지원을 받고 있는 「환경보전협회」 1개 단체에 불과하였고 대부분의 단체는 “불만족스럽게” 평가하고 있다.

<표 7>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의 노력

문항	아주 만족	만족스런 편	그저 그렇다	불만족	아주 불만족
비율	0%	1%	2%	5%	12%

이러한 원인은 다음 <표 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관료사회의 타성과 환경문제에 대한 적은 투자비용을 들고 있다. 관료사회의 타성은 주로 자료 및 정보의 비공개, 민간환경단체(특히 “미등록단체”)에 대한 배타적 자세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정보의 공개는 이전에 비하여 향상되었다.

<표 8> 불만족의 원인

문항	적은 투자비	인식부족	관료적 타성	환경교육의 부재	기타
비율	28%	17%	33%	11%	11%

주 : 1 순위 답변만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임.

2. 주민참여에 있어서 문제점

1) 제도의 미비

1991년 8월 이전에 우리 나라에 있어서 개인 또는 지역주민이 환경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었다. 따라서 앞에서 예를 든 “안면도 핵폐기물저장기지 반대운동”, “부산 반송동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 반대운동”, “군산 동양화학 TDI공장 반대 주민 운동” 등은 모두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치 않아 발생한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

<표 9>,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 환경단체들은 현재의 주민참여를 “활발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제도적 장치의 미비와 홍보부족을 들고 있다.

<표 9> 주민 참여 정도에 대한 평가

문항	활발한 편이다	그저 그렇다	활발하지 못하다	모르겠다
비율	0%	33%	67%	0%

<표 10> 주민 참여가 부진한 원인

문항	제도적 장치의 미비	홍보부족	생계	국민성	기타
비율	33%	24%	14%	24%	5%

2) 사전 예방이 아닌 사후 대응

우리나라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참여는 주로 환경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그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것은 환경문제에 대한 여러 정보가 왜곡되거나 통제되었던 점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지만,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대처방법의 후진성을 면하기 어렵다.

3) 실천적인 환경운동의 미흡

환경처 “등록단체”의 경우, 단체의 권익보호(주로 직능단체), 공단(지역)환경보전(지역단체), 환경문제에 대한 계몽이나 홍보(환경보전협회, 환경보전범국민추진협의회)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미등록 단체”의 경우에는 주로 문제제기 및 환경오염에 대한 반대 운동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실천적인 환경운동이 크게 부족한 현실이다.

4) 예산과 인력의 부족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간 환경단체는 3개의 단체에 불과하며, 이들은 주로 환경보전에 관한 홍보, 계몽, 정화운동을 주로 하고 있다.

민간 환경단체 특히 주민참여를 주도하고 있는 미등록 단체는 앞서 분석한 것과 같이 예산과 인력면에서 영세성

을 면치 못하고 있어 효율적인 환경운동 또는 주민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환경운동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주민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역에 맞는 독자적인 연구보다는 외국의 예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은 점도 환경운동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한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5) 단체간 협력의 부족

환경운동은 성격에 여러 단체가 협력하여야 효율성을 기할 경우가 있으나, 우리나라 환경단체는 유사한 단체가 중복된 예가 많다. 단체의 목적도 환경문제를 주로 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사회운동', '소비자 보호', '종교적 정의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부차적으로 환경문제에 참여하는 단체 등으로 활동 목표가 서로 다르므로, 단체간 협력이나 역할분담시 효율성을 기하기 어렵다. 또 『공해추방운동연합』을 제외한 대다수의 환경단체들이 지역을 중

<표 11> 환경교육의 주관

문항	정부주관	정부주도+민간참여	민간주도+정부후원	민간주도
비율	0%	5%	90%	5%

2) 고등 교육기관의 역할 강화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참여와 사회 환경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에 있는 환경 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원)에 6개월과정의 야간강좌나 방학을 이용한 계절강좌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민간단체의 환경교육 참여

성인들을 대상으로한 환경교육의 경우는 대상이 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들이므로 민간 환경단체의 환경교육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대로 민간단체에 의한 환경교육이 내실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재정적 지원, 교육장소의 지원, 전문강사의 알선 등 실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4)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환경교육 강화

환경문제는 지역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각 지방에 적합한 환경교육이 실시되는 것이 효율적이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환경교육에 관심을 갖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개설하고 있는 『시민대학』 등에도 환경교육과 관련된 강좌가 개설되어야 한다.

5) 언론 매체를 통한 환경교육의 강화

민간단체들은 다음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언론 매체에 의한 환경교육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물론 언론

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전국적인 협력체제를 이룩하기 어렵다.

실문조사 결과, 미등록 환경단체들은 다른 단체와 함께 환경문제에 참여한 경험을 모두 갖고 있으며, 조직의 역량이 커지고 환경문제 대중화에도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일회성에 그치고 조직력도 미약하다고 답변하고 있다.

3. 사회 환경교육 향상 방안

1) 사회 환경교육의 주제

그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주민참여의 주대상인 성인들에 대한 환경교육이 전무하였으므로, 성인들에 대한 환경교육이 시급하다. 사회 환경교육에 대해 민간단체들은 "민간주도+정부후원"의 형태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매체에 의한 환경교육이 사건중심, 흥미위주이며 단편적인 면이 없지 않으나, 환경교육의 초기인 한국에 있어서 언론매체에 의한 환경교육은 효과가 매우 큰 편이다.

<표 12> 환경교육 방법 선호

문항	언론매체	표어나 포스터	강연회 및 연수	학교교육
비율	52%	0%	12%	36%

4. 민간단체의 활성화 방안

1) 정부와 민간단체의 의견교환 활성화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민간 주도의 환경보전 실천운동을 적극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고 있으나, '91년 4월 부임한 신임 장관과의 간담회에도 미등록 환경단체는 배제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정부 환경담당부서의 민간 단체에 대한 배타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한가지 예이다. 정부 부서의 많은 공무원들은 미등록 환경단체에 대하여 '반정부적', '항시비판단체'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정부와 미등록 환경단체의 의견교환을 막고 있는 장애요인의 하나이다.

또 민간환경단체도 정부와의 의견교환에 소극적인 면이 없지 않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노력과 함께, 보다 발전된 주민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양자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발전적인 의견 교환을 위하여 정례

적인, 또는 사안에 따른 의견교환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

현재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3개단체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미등록 단체"를 활용하는 것이 환경에 관심이 큰 주민의 교육이라는 측면이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환경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일 것이다. 따라서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업을 스폰서로 소개해 주는 등 여러가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3) 민간 환경단체간 협력 강화

1990년 4월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된 "지구의 날 행사"에는 공해추방운동연합, 대한 YMCA 연맹, 한살림 등 50여개의 민간단체가 참여하여, 국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이러한 민간 환경단체들간의 협력을 항상 유지하고, 단체간의 친화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체 성격에 따른 협의회나, 지역 환경단체간의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야 한다. 낙동강 폐쇄오염 사건을 계기로 준비중인 대구공해추방운동협의회 등은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IV. 결 론

우리나라에 있어서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 참여는 대중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환경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 및 사후대응의 차원에 머무르는 등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회환경교육도 정부차원에서는 공무원 및 환경관련 전문인력을 대상으로하는 실무교육이 대부분으로 실천적인 내용의 환경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일부 민간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환경교육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예산, 인력, 홍보부족 등으로 범 국가적인 본격적인 사회 환경교육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주민참여가 보다 발전적으로 이루어 지고 환경정책과 지역 주민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환경정책의 결정과정의 공개 및 행정의 민주화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또 주민참여가 대중적인 지지를 얻고 환경보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 환경운동의 성격도 사전에방향

등의 강화, 대응책 제시, 실천운동의 강화 등으로 그 성격이 전환되어야 하며, 사회 환경교육을 강화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주민참여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 환경교육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기관과 민간단체에 의한 환경교육을 확대하여야 하며, 언론매체에 의한 환경교육도 국가 공익의 차원에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민간 환경단체 특히, "미등록 단체"의 활성화는 건전한 주민참여와 효율적인 사회 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수적인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단체간의 의견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져 상호 불신을 제거하여야 하며, 정부의 민간단체에 대한 각종 지원과 민간단체간의 성격 및 지역에 따른 활발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 8조 (주민의견 수렴)
 안기희, "환경행정과 주민참여", 국가발전과 환경보전, 환경경제신문사 자료집, 1991.
 환경과 공해 연구회, 환경과 공해, 14호, 14-16, 1991.
 환경처, 환경백서, 304, 1991.
 환경과 사회연구회, "민간환경운동단체의 활동현황과 민간환경운동의 방향설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관리연구, 4호, 29-41, 1991.
 국민일보, 환경교육 특집(4), 1990. 9. 25.
 환경처, 환경백서, 323-328, 1991.
 김규용, "한국의 환경정책과 환경교육", 한국환경교육학회, 환경교육, 창간호, 50, 1990.
 환경처, 환경백서, 305, 1991.
 한국교육개발원, "1990년 한국 환경교육의 전략과 실천 방안", 한독환경교육학술회의 자료집, 1989.
 신세호, "학교 환경교육의 필연성과 강화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한영 환경교육 세미나, 9, 1991.
 김용만, "한국의 국민학교에서의 환경교육", 한국환경교육학회, 환경교육, 창간호, 148, 1990.
 신세호 외, 한국 환경교육의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 1987.
 최석진, "우리나라 환경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개발, 11(6)호, 27, 1989.
 정 용, "한국의 환경 전문인력 양성 교육", 한국환경교육학회, 환경교육, 창간호, 195-199, 1990.

ABSTRACT

Residents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Problems and Public Environmental Education : Present Status and Improvement Measures

Eui - Chan, Jeon

(Dep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Dongshin University)

Residents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Problems is essential for achieving better environment. But, the Residents Participation in Korea is lack of popularity and still be situated in the level of only problem raises and protests afterwards.

Public Environmental Education necessary for Residents Participation, is not a practical education, because the education in the government side be performed mostly for the government employees and the environmental experts.

To encourage the Residents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Problems, the decision procedure of the environmental policies should be opened, and public Environmental Education should be activated. Also, to develop the Residents Participation with social supports, the environmental movements should better be focused on preventive measures, solution suggestions, and practical movements.

To enhance the Public Environmental Education, the NGOs' programs and mass-media campaign for environment should be enlarged and supported by the government.